

농업재해대책 관련 한농연의 대응활동 성과 및 경북 우박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 강력 촉구

소방방재청의 재난복구비 기준 변경 방침 유보

소방방재청은 5월말 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”을 입법예고하였다. △ 시군구의 자연재난 평가 결과에 따라 복구비를 차등지원하고 △주택, 비닐하우스,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축소하거나 제외하며 △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사유시설 복구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.

이에 한농연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이번 입법예고안의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였다. 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농업 규모와 고액 농가부채 등 열악한 우리 농업의 현실로 볼 때, 소방방재청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한-미 FTA와 DDA(도하개발아젠다) 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더욱 큰 재정적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.

현행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의 지원부담율은 35%이나 실제 복구비용 대비 지원부담율은 축사 18.5%, 비닐하우스 26.0%에 불과하다. 지구 온난화로 농업재해 규모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비중을 줄이고 보험제도로 전환하려는 소방방재청의 입법예고안은, 농업재해의 피해를 농업인이 고스란히 떠안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한농연은 강조했다.

한농연은 각종 성명서 발표, 중앙 주요 언론사 및 인터넷언론사 등의 보도 및 라디오 인터뷰 등의 활동을 통해 소방방재청의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. 또한 한농연의 각 지역 연합회와 타 농민단체와 농협 등 생산자단체까지 적극 나서, 지역 차원에서의 여론조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소방방재청의 제도 개편을 중

단할 것을 촉구하였다.

이러한 한농연의 선도적인 농민운동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다. 소방방재청은 2007년 7월 2일 본 연합회에 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(안) 일부조항 유보 결정 통보(복구지원단-1927)” 공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앞으로도 한농연은 현장지향적인 농민운동을 통해 12만 농업경영인 및 350만 농민들의 권익을 확보하고 지켜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.

1. 관보 제16551(2007. 5. 23)호 및 소방방재청 복구지원단-1825(2007. 6. 19)호와 관련입니다.
2. “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 개정령안의 주택, 비닐하우스, 축사, 농작물 등의 재난지원금 부담율을 연도별로 차등 지원후 배제토록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한미 FTA 등 농어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재검토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경북도 우박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

한농연경북도연합회(회장 이일권) 및 도 임원과 경북도의회 의원 등은, 7월 11일(수) 12시부터 14시까지 과천정부청사 인근

식당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 및 관계 공무원과 “우박피해 관련 간담회”를 실시하였다.

농림부에서는 박



홍수 장관을 포함하여 관련부서 국장 2명과 과장 2명,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참여하였다. 한농연경북도연합회에서는 이일권 회장을 비롯한 시군연합회 회장 13명과 경북도의회 박노옥 의원과 남종식 의원, 김명섭 청송군의회 의원 및 직원 3명이 참여하였다. 본 연합회에서는 최태림 수석부회장과 박상희 정책조정실 차장이 간담회 전 과정에 동참하였다.

■ 간담회 주요 질의내용

▶김봉옥 청송군연합회 회장 :

*여름사과가 다음달부터 바로 출하된다. 생산단가가 kg당 940원하여 20kg그램으로 하면 18,800원 정도가 된다. 생산비 정도는 맞춰 달라.

*보험료를 내는 시점이 돈이 가장 없을 시기이다. 그래서 보험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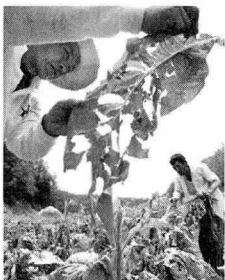
* 피해과실이 상품성이 없으므로 주스로 해서 팔 수 있도록 생즙기를 작목반별로나 읍면별로 보급해 달라.

▶홍병기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:

*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이 어렵다. 국비 지원율을 60%까지 상향하여 달라. 농작물재해보험의 농협수수료가 15%정도 되는데 정부재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. 정부에서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돌려 국비 지원율을 높이면 될 듯 하다.

*농작물재해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.

*경북도에서 저리 자금으로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, 현실적으로 농협에서는 채권확보 등을 꺼려해 주지 않는다.



▶김희목 봉화군연합회 회장 :

우박피해 상습지역에 비가림 처럼 설치할 수 있는 방조망을 설치해 달라.

▶남종식 경북도의회 의원 : 사실 피해가 태풍 루사나 매미 때 보다 피해가 더 심하다. 현장의 농가들은 거의 시름에 잠겨 있다.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해 달라.

▶유병국 안동시연합회 회장 : 경북도에서는 재해 복구비와 관련하여 예비비 40억, 농어촌진흥기금 150억원을 0.5%로 지원한다. 기금을 대출 받으려면 농신보 보증을 이용하여야 하나 농신보 한도가 거의 다 찬 농가들이 대부분이라 현실적으로 지원받는 농가가 없다. 농신보 보증 한도를 상향해 달라.

▶서정권 영주시연합회 회장 : 농협중앙회에서 1,000억 원 정도의 무이자 자금을 확보하여 피해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.

■ 농림부의 답변 내용

*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: 타 보험에 비해 국비지원율이 높다. 품목확대가 급선무이다. (2011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가 우선적) 보험료 분할 납부는 좋은 의견이다. 바로 검토 후 시행하겠으며 보험료 대출도 검토해보겠다.

* 피해과실 수매 및 특별영농비 지원 :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나 어려운 상황이 많다.

* 농업재해 경북도 대출이 농신보 문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 : 농림부장관이 관련 실국에 확인해보도록 지시하였다.

* 유해조수 피해를 재해로 인정 : 국회에서 세 명의 의원이 제안하였으나 안됨(논란 끝에 재해로 보기가 어렵다는 입장), 현재 자기농지에 들어온 것은 포획할 수 있도록(자위권) 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현재 논의중이다.